지자체-대학 지역혁신사업에 '대전·세종·충남 플랫폼' 선정

교육부-韓연구재단, 지역인재 양성
전환형엔 울산·경남 플랫폼 선정
4개 플랫폼에 총 2439억 투입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협업해 지역 인재를 양성토록 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지역혁신사업' 사업자로 대전·세종·충남 플랫폼이 신규 선정됐고, 울산 지역이 추가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6일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신규로 대전·세종·충남 플랫폼을 예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단일형이 다른 지자체와 연합해 복수형으로 전환하는 유형인 전환형으로는 울산·경남 플랫폼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협업체계를 구축,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를 아우르는 선순환 구축을 지원한다.

올해 8개 지자체(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울산·경남, 충북)가 참여하는 4개 플랫폼에 국비 1710억원과 지방비 729억원 등 총 2439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경남, 충북, 광주·전남 등 3개 플랫폼을 선정한 이후 운영성과를 확산하고 지역 간 협력을 통한 동반 상승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신규·전환형 각 1개 선정 공모를 진행했다.

신규 선정된 대전·세종·충남 플랫폼은 충남대와 공주대 등 권역 내 24개 대학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카카오모빌리티, 삼성디스플레이 등 68개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해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와 모빌리티 정보통신기술(ICT)을 핵심분야로 선정했다.

특히 이 플랫폼에서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기술개발·연구 기반, 충남은 제조업 역량, 세종은 자율주행 실증특구 등 실증 기술·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복수형 연합을 통해 해당 지역에 부족한 핵심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권역 내 24개 대학이 역할을 분담하고 강점을 결집해 연 3000명의 핵심분야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이 중 연 400명의 핵심인재를 '대전·세종·충남 공유대학'을 통해 배출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교육기관 책임 회피… 정의로운 판결 촉구"

대학생 1.6만명 등록금 반환 요구 서명
"교육부, 교육 관리감독 의무 이행하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를 주축으로 결성된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가 6일 등록금 반환 소송 재판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

코로나19 여파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낸 대학생들이 법원에 "등록금 반환을 위한 사법부의 올바른 판결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를 주축으로 결성된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6일 등록금 반환 소송 재판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대학생 소송인단 2744명은 비대면 수업 장기화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와 사립대학 20여 곳을 상대로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전국 40여 개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은 사립대에는 학생 1인당 100만원, 국공립대에는 학생 1인당 50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박주현 씨는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이 질적으로 다르고 이 차이를 많은 대학생들이 절실히 체감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온라인 수업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발언으로 대학생들의 고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과 교육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학생들은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운동본부는 대학과 교육부가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교육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져버렸다고 일갈했다. 지난해 소송 시작 이후 일부 대학본부가 소송 참여 학생을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소송 취하를 요구하며 논란이 일었다.

운동본부는 "각 대학이 소송 취하를 요구하면서 교육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저버렸고 정부도 이를 관리 감독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실제로 소송 취하 강요 전화와 면담,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불공정한 처사로 인해 소송 취하를 결정한 학생들이 11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올해에도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자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전국 290개 대학 중 95% 대학 등록금 동결한 상태다.

앞서 운동본부는 지난달 '코로나19 피해 사례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세 발자국에 한 번씩 꿇어가며 삼보일배를,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10㎞ 가량의 행진을 진행했다. 이같은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서명 운동'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1만 6000여 명의 대학생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현진 기자 lhj@

한양대,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플랫폼 기관 선정

뮤지컬 전 과정 밀착 멘토링 프로그램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 '2021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의 플랫폼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3년 연속 선정된 한양대는 내달 7일부터 6개월 간 멘토링 프로그램 '인투더크리에이션!'을 운영해 뮤지컬 극작 및 작곡, 스토리 창작분야 인재 양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한양대는 ▲극작 ▲작곡 ▲스토리 창작 분야에 총 13명의 전문가를 멘토로 초빙했으며, 오는 14일까지 참여교육생(멘티) 26명을 모집한다.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창의적 소질과 소양을 갖춘 예비 창작자 중 뮤지컬 분야(극작, 작곡)와 스토리 창작 분야(시나리오, 드라마대본, 희곡)에 관심을 갖고 있고, 각 분야의 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이현진 기자

고려대와 고려대 교우회가 개교 116주년을 맞아 5일 오전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고려대학교 개교 116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구자열 고려대 교우회장, 김상희 한국연예인한마음회 이사장, 연만희 유한양행 고문, 정진택 고려대 총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려대

고려대, 개교 116주년 기념식 개최

고대인의 날 진행

고려대학교와 고려대 교우회는 개교 116주년을 맞아 5일 오전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고려대학교 개교 116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모교의 명예를 드높인 교우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랑스러운 고대인상은 연만희 유한양행 고문(경제 49)과 김상희 한국연예인한마음회 이사장(법학 61)이 수상했다.

연만희 유한양행 고문은 1955년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61년 유한양행에 입사해 유한양행 대표이사 회장, 공익법인 유한재단 이사장 등을 지내며 전문경영인으로서 기업발전과 경제정의 구현에 앞장섰다.

김상희 한국연예인한마음회 이사장은 1961년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하던 해에 KBS 전속가수 시험에 합격해 데뷔한 이래 최초의 학사 여가수이자 최고의 국민가수로 활약했다. 1981년 사회봉사단체인 한국연예인한마음회를 설립해 지금까지 회장 및 이사장을 맡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를 40여 년간 이어오고 있다.

이밖에도 ▲특별공로상(고 김동기 전 대한민국학술원 회장) ▲사회봉사상(인종과 국적을 초월하여 질병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헌신해온 이재훈 교우, 의학 86) 등이 수상했다.

고려대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인물의 공로를 기리고자 제정된 발전공로상(크림슨어워드)의 수상자로는 박기석 시공테크 회장(독문 69)가 선정됐다.

고려대 소액정기기부클럽(KU 프라이드클럽)의 발전·확산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선정해 2017년부터 시상하는 'KU 프라이드클럽어워드'에 올해는 윤화일(경제63) 교우가 선정됐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권역에 캠퍼스타운… 스타트업 지원

서북·서남·동북 3개 지역

서울시는 서북·서남·동북 3개 권역에 캠퍼스타운과 연계한 창업밸리를 만들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가 자리한 서북권에 '청년창업 메카'를, 서울대-숭실대-중앙대가 위치한 서남권에 '연구개발(R&D) 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동북권에서는 고려대-경희대-서울시립대 등과 함께 대학-지역 연계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대학 간 협업을 통해 창업 시너지를 내고 지역균형 발전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창업밸리 기업이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혁신성장펀드, 대기업과 연계한 오픈이노베이션,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 등 정책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상반기 중 마련할 서울캠퍼스타운 2.0 추진계획을 기반으로 권역별 캠퍼스타운 밸리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창업하기 좋은 '청년도시 서울', 유니콘 기업을 품은 캠퍼스타운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청년, 대학, 지역과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교육부, 대학교원노조와 첫 단체교섭

노조 시설편의 제공 등 안건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지난해 출범한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이 정부와 처음으로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교육부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국교조와 단체교섭을 위한 제1차 본교섭(상견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교조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전의 교원노조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지난해 6월9일 개정된 이후 고용노동부에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가 수리돼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후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5개월간 예비교섭과 실무교섭 상정 안건 합의 이후 이번 본교섭으로 이어졌다.

이번 단체교섭에 상정된 안건은 노조에 대한 시설편의 제공, 대학교원 보수·수당, 대학 내 안전·보건 및 재해 방지, 국립대학법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추진 등 총 65건이다.

/세종=한용수 기자